

2026년도 2차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 공채(순정) >

- [필수2] 해양경찰학개론(01), 형사법(12)
- [선택1] 해사법규(04), 헌법(05) 中 1과목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응시자 유의사항

- 본인의 응시분야, 계급, 과목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신속히 페이지를 넘겨 인쇄 상태 등 파본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문제지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교체를 요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성 명 :

응 시 번 호 :

해 양 경 찰 청

해양경찰학개론

1. 다음 중 미국 해안경비대(USC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미국 해안경비대(USCG), 일본 해상보안청,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신분은 모두 경찰관이다.
- ② 초기에는 연방 정부의 세수 확보 및 밀수근절을 위해 조직·운영되었다.
- ③ 해상에서 수색·구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5대호 등 내수에서는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 ④ 항로표지는 미국 해안경비대(USCG)와 대한민국 해양경찰이 공통으로 수행하는 업무이다.

2. 다음 <보기>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수난구조비용의 지급에 대한 내용이다.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보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조에 종사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인은 ()으로부터 수난구조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① 해양경찰청장
- ② 해양경찰서장
- ③ 해양수산부장관
-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 다음 중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테러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테러 특공대를 운영하는 정부기관에 국가정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항공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현장의 대응 활동을 총괄하는 현장지휘본부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맡는다.
- ④ 해양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대테러 조직인 특공대는 해양경찰청장 직할대로 둔다.

4. 다음 중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관내 안전·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파출소의 교대근무제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서지역 파출소 등의 교대근무제는 지역별 실정에 맞게 해양경찰서장이 정할 수 있다.
- ② 연안구조정 운용 책임자는 해상순찰 시 출입항을 포함하여 1시간 간격으로 파출소 등에 위치 및 해상상황을 보고하고 입항 후 지체없이 연안구조정의 행동사항, 검문검색 등 중요 순찰결과를 파출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출장소를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고, 출장소는 파출소장 소속으로 둔다.
- ④ 탄력근무형 출장소는 관할 파출소의 소속 경찰관이 출장소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근무한 후에 파출소로 복귀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파출소장은 지역의 안전, 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근무형 출장소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A는 해양경찰서장으로 재직 중 법령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강등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A가 총경 계급에 2020년 승진 임용되었다면, A는 연령정년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2031년에 계급정년이 도래하여 경정 계급으로 퇴직하게 된다.
- ② A는 총경 계급의 1계급 아래인 경정으로 내려지고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되며 3개월간 보수 전액이 감액된다.
- ③ A가 금전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 강등된 경우 그 이익의 10배 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 ④ A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따라서는 총경 계급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

6.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표류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수중에 가라앉은 물건을 말한다.
- ②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 ③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하고,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 ④ ‘수난구조’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7. 다음 행정기관의 처분 중에서 강학상 법적 성질이 가장 다른 것은?

- ① 양식장 면허 ② 수상레저사업 등록
- ③ 해기사 면허 ④ 유선사업 면허

8. 다음 <보기>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및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수상레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증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갱신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조종면허의 효력은 정지된다. 다만,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후 면허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다음 날부터 조종면허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발급받은 등록번호판 2개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옆면과 뒷면에 각각 견고하게 부착해야 하며,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 미성년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수상레저안전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9. 해양경찰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상 해선(연해항로 이상의 항로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적석수 2백 석 이상의 것)의 해원 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과 항공기의 승무원 중 기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수사실행의 5원칙 중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은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③ 「(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상 ‘총기, 대량의 탄약, 폭발물 절도 사건’과 ‘5,000만원 이상 다액 절도 사건’은 ‘을호’ 수사긴급배치 사건에 해당한다.
- ④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상 특별 중요 장물 수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발급하고, 홍색용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10. 다음 중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상 상황근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민원의 접수, 조사·처리
- ②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수배자에 대한 보호·감시
- ③ 문서의 접수 및 처리
- ④ 순찰 근무자와의 통신 유지 및 자체경비

11. 다음 중 「범죄인인도법」상 범죄인 인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절대적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 ② 범죄인의 인도 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 관할로 한다.
- ③ 인도 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원수의 가족의 생명·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 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12. 다음 중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이 100 kl 이상 300 kl 미만인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방제대책본부가 설치된다.
- ② 중앙방제대책본부는 본부장, 부분부장, 중앙조정관 각 1명과 대응부를 둔다. 광역·지역방제대책본부는 본부장, 광역·지역조정관 1명 및 대응부를 둔다.
- ③ 방제대책본부의 해체 후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서 수행하던 업무는 해양경찰청으로 인계해야 한다.
- ④ 본부장은 오염사고의 상황분석·평가 및 합리적 방제 조치를 위해 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방제대책회의는 본부장 주관으로 1일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안건 또는 방제조치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13.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위원회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②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 임용하려는 경우 경위 계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 ③ 승진심사는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심사승진임용 예정인원의 5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 ④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4.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무기사용 요건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 등의 나포를 위한 경우
- ② 범인의 체포를 위한 경우
- ③ 선박 등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 ④ 경고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15. 다음 중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포함)」상 해양경찰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부, 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안전총괄부를 두며, 안전총괄부장의 계급은 모두 경무관으로 보한다.
- ②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는 다양한 지방해양경찰청 사무 중에서 기획운영과 사무는 관장하지 않는다.
- ③ 해양경찰정비창에 창장을 두되, 창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 ④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두는 서해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의 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16. 다음 중 「해양경찰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해양경찰 위원회는 해양수산부에 두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모두 비상임으로 한다.
- ② 해양경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0년 이상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치안감 이상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중임할 수 없다.

17. 다음 중 법률 제정 절차와 예산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예산안은 모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진다.
- ②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진다.
- ③ 법률안은 정해진 제출기한이 없지만, 예산안은 「헌법」상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④ 법률안과 예산안은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 모두 정부로 이송되어 시행되거나 집행된다.

18.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로는 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스쿠터, 수륙양용기구 등이 있다.
 - ②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한 날로부터 2년(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사람은 이를 위반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조종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다음 중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 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6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관련 국내법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된다.

20. 다음 중 「유엔해양법협약」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 관계 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 ② 잠수함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 해면 위로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해야 한다.
 - ③ 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는 동안 어로행위는 관계 당국의 허가 등을 받는 경우 무해통항으로 본다.
 - ④ 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는 동안 무기를 사용하여 하는 훈련 또는 연습은 관계 당국의 허가 등을 받는 경우 무해통항으로 본다.

형사법

1. 다음 중 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② 상습범과 같은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어도 그 포괄일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 ④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2. 다음 <보기> 중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실행의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自服)한 경우
- ㉢ 사기죄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를 집행받은 경우
- ㉣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경우
- ㉤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범한 자가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다음 중 협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감정적 욕설을 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 ②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므로, 객관적으로는 상대방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협박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 ③ 협박죄는 미수범 처벌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침해범으로 보아야 한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와 횃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래 채취에 관하여 항의하는 데에 화가 나서 횃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한 경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다음 중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 ②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 및 상해를 가할 의사가 필요하다.
- ③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끌은 경우 폭행죄의 폭행으로 볼 수 없다.
- ④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동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 행위의 습벽을 말하고, 동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5. 다음 중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자를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②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③ 체포영장 집행 시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수색을 할 수 있다.

④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포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6. 다음 중 방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자 불이 옆에 있는 자기 소유의 일반건조물에 옮겨 붙은 경우 연소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 놓고 불을 붙인 천 조각을 던져 그 불길에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설령, 그 불이 완전연소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붙은 이상 그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기수에 이른다.

③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행위를 하여 공무원에게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하지 않은 다른 집단원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 없다.

④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 붙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방화죄는 기수가 된다.

7. 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③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간음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준강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8. 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의 대상자는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이후 검사가 기소하였더라도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③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기각 결정과 석방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이 있으며, 검사와 피의자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9. 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이는 병원이 약국장에게 불법원인급여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③ 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④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는 차량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등록에 의하여 차량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 유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차량의 등록 명의자가 아닌 사람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 ②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 ③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 ④ 유추해석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문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11. 다음 중 문서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낙찰 받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사실적증명원을 구청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부터 기재된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로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 ②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③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한 행위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기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창출시킨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
- ④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

12. 다음 중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②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범죄사실만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허위신고가 되지 않는다.
- ③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무고의 고의로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믿고 신고하였으나 우연히 그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6. 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 ②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③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요지나 체포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④ 甲이 자신의 주거에 침입한 도둑 A를 수회 때려 넘어뜨려 제압한 이후, A가 도망하려 할 뿐 반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등에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하여 뇌사 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17. 다음 중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부하직원이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는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도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인정된다.
 - ②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의 경우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③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의미한다.
 - ④ 甲이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제조한 경우 궤련담배제조업의 허가기준은 존재하나 전자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이 없는 이상 甲에게 담배제조업 관련 법령의 허가기준을 준수하거나 허가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때까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18. 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교사자가 전화로 범행을 만류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 교사자가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②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③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경우라도 원인된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실화죄의 미수로 불가벌에 해당한다.
 - ④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 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 사이에 순차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19. 다음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아 상해를 가한 경우
 - ② 甲이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그 클럽 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 ③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甲이 다수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 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소수 입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케이블 TV 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 ④ 한의사 자격이나 이에 관한 어떠한 면허도 없는 甲이 찜질방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간의 돈을 받고 아픈 부위의 혈을 주물러 근육을 풀어주고 그 부위에 부항을 뜬 후 그 곳을 부항침으로 찌르는 등, 단순히 수지침 정도의 수준에 그치지 아니하고 부항침과 부항을 이용하여 체내의 혈액을 밖으로 배출되도록 한 경우

20. 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③ 피의자의 변호인이 인정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사에게 피의자의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검사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을 퇴실시키는 것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은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그것은 변호인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라고 볼 수도 있다.

해사법규

1. 다음 중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15일 이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어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 이내에 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④ 「어선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어선검사를 받기 위하여 시운전을 하려는 경우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다음 중 「도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강제도선 대상 선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600톤인 선박
- ②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0톤인 선박
- ③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예선에 결합된 부선(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3,000톤인 선박)
- ④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1,500톤인 선박

3. 다음 <보기>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
|--------------------------|----------|
| ㉠ 어선의 종류 | ㉡ 어업의 규모 |
| ㉢ 부속선의 선박 수 | ㉣ 어선의 척수 |
| ㉤ 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예상어획량 | |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4. 다음 중 「낙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낙시어선의 출항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상법 시행령」에 따라 초당 풍속 10미터 이상 또는 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낙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시간, 기상 및 해상 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낙시어선업자·선원·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낙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낙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기상법 시행령」에 따라 태풍·풍랑·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낙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5. 다음 중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유해물질이 유입된 구역의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6. 다음 <보기> 중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이 적용되는 선박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통선(총톤수 5.0톤)
 - ㉡ 수면비행선박
 - ㉢ 여객정원이 15명 이상인 선박(총톤수 4.5톤)
 - ㉣ 낙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총톤수 4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다음 중 「선박법」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선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지 아니한 선장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국제충돈수’란 「197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이다.
 - ③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한국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말소 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8.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인선이 부선을 끌거나 밀고 있는 경우의 예인선 및 부선
 - ②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
 - ③ 주로 노와 샷대로 운전하는 선박
 - ④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9.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200톤의 위험화물 운반선은 ‘관제대상선박’이다.
 - ②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정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를 갖추고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여야 한다.
 - ③ ‘선박교통관제구역’이란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와 내수 내에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 ④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도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10.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
 - ②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 ③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6조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해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행하되,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 다음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따라 유·도선사업자가 유·도선에 승선하는 선원 및 그 밖의 종사자(「선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의 종류 및 실시주기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구분	실시주기
퇴선 훈련	(㉠)
인명구조, 추락 및 충돌·좌초사고대응 훈련	(㉡)
기름유출대응, 소화훈련	(㉢)
침수 및 추진기관 사고대응 훈련	(㉣)

구분	㉠	㉡	㉢	㉣
①	매월	6개월	매월	6개월
②	매월	매월	매월	6개월
③	매월	6개월	6개월	6개월
④	매월	매월	6개월	6개월

12. 다음 보기 중 「항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만시설에서 ‘항만친수시설’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교육 시설
 - ㉡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 ㉢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 ㉣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 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해체 해양 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에 오염물질의 처리 실적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작업개시 14일 전까지 선박을 해체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환경관리해역에서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조사 활동은 해양경찰청장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이다.
- ③ 해양시설에서의 방제선등의 배치·설치 및 자재·약제의 비치 상황에 관한 검사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이다.
- ④ 「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14. 다음 중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선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승선평균임금’이란 선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한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한다.
- ③ 선장은 당해선박의 해원 4분의 1 이상이 교체된 때에는 출항후 24시간 이내에 선내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비상신호의 방법은 기적 또는 사이렌에 의한 연속 7회의 단음과 계속 1회의 장음으로 한다.

15. 다음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심판원은 해양사고가 해기사나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재결로써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 ②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중앙 심판원이 병합하여 심판한다.
- ③ 심판원이 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면허의 취소·업무정지·견책이며, 업무정지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 ④ 조사관은 사건을 심판에 부쳐야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후 3년이 지난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

16.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조본부의 장은 생존자를 구조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등 더 이상 구조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활동을 종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 ② 표류물 또는 침몰품을 습득한 자는 지체 없이 이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③ ‘구조’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 ④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협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17. 다음 중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운항 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내 위험물에 대한 조치
- ② 운항관리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의견의 제시
- ③ 여객선의 입항·출항 보고의 수리
- ④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및 복원성 등 감항성 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

18. 다음 중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과학조사’란 해양의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밝히기 위하여 해저면, 하층토, 상부수역 및 인접대기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가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루어 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양과학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가 조사계획서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해양과학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④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조사자료를 근거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 등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19.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수상형 체험활동은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멍줄을 1개 이상 갖추고, 연안 체험활동자 10명 당 구멍줄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 ③ 수중형 체험활동은 1개 이상의 구멍튜브를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0명 당 구멍튜브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 ④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해역 인근에 거주 하는 주민으로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20.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에서 선박등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선박등의 항행 또는 입항·출항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선박 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해산 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 선박에 대한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
 - ② ‘경비세력’이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인력, 함정, 항공기 및 전기통신 설비 등을 말한다.
 - ③ 해양경비와 관련해서는 「통합방위법」에 규정 되어 있더라도 「해양경비법」에 정한 것을 우선 적용한다.
 - ④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대량파괴무기나 그 밖의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 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헌법

1. 다음 중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③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대법원은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 또는 「국민투표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 전부의 무효 판결을 하여야 하며, 일부의 무효 판결을 할 수는 없다.

2. 다음 중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②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운행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험책임의 원리에 기하여 무과실 책임을 지운 것만으로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헌법 제119조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 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지침이자 구체적 기본권 도출의 근거로 기능하며 독자적인 위헌심사의 기준이 된다.
- ④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으나, 이로부터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3. 다음 중 선거권 및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민의 선거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하라는 뜻이며 선거권을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라는 의미이다.
- ②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갖는 중요성으로 인해 입법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하는 반면, 헌법재판소가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경우 그 심사 강도는 완화하여야 한다.
- ③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사전투표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까지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4. 다음 중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제도의 헌법적 기능을 고려하면 무소속 후보자와 정당소속후보자 간의 합리적이고 상대적인 차별은 가능하나 정당 후보자에게 별도로 정당연설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다.
- ② 정당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정당의 법률관계에는 「정당법」의 관계 조문 이외에 일반사법(私法) 규정이 적용된다.
- ③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해산결정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숙고해야 하는바, 이 경우의 비례원칙 준수 여부는 통상적으로 기능하는 위헌심사의 척도에 의한다.
- ④ 헌법상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5. 다음 중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민주주의하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개별유권자 혹은 집단으로서의 국민의 의사를 선출된 국회의원이 그대로 대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②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 ③ 국가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는 것은 사회국가원리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 ④ 법률의 제정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 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6. 다음 중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호의무 이행을 위한 행위의 형식에 관하여도 폭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공직선거법」상 주거지역에서 확성장치의 최고 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 된다.
- ③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최대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④ 구 「동물보호법」 제33조 제3항 제5호에서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에 다른 지역적 제한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7. 다음 중 공무원제도 및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나이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대한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해치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를 불문하고 영구적으로 모든 공직에 임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 ③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를 정당의 재량에 맡기는「공직선거법」조항은 정당으로 하여금 당내경선을 거치지 않고 공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한 것으로 당내경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④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법관임용지원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8. 다음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각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이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아야 한다.
 - ②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 중 ‘잠수용 스쿠버 장비 사용’에 관한 부분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③ 병역의무의 이행으로서의 현역병 복무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운전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9. 다음 <보기> 중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경찰공무원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 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규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 ㉡ 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본문 [별표 3] 중 외끌이 대형 저인망어업의 조업 구역을 서남해구 외끌이 중형 저인망어업과 다르게 규정한 것은 외끌이 대형 저인망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가 국가유공자법상 가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정경쟁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다.
 - ㉣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급여를 받을 유족 없이 사망한 경우 급여수급자를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공무원 연금법」 조항은 「국민연금법」에서 형제자매를 사망일시금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형제자매를 급여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 | |
|--------|--------|
|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10. 다음 중 신뢰보호원칙 및 소급입법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종전의 「수산업법」에 의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주장이 가능하던 관행어업권에 대하여 「수산업법」 시행 이후부터는 등록하여야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재산권을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규정으로 위헌이다.
 - ②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③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 결과로 강화한 개정 「형법」 조항을 「형법」 개정 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가석방을 기대하고 있던 수형자가 국가 공권력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적법한 신뢰를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 ④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도,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이 개인의 신뢰 보호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11. 다음 중 헌법상 국민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제정을 통해 수도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것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아서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 ③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 ④ 대통령이 어떤 사항을 국민투표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2. 다음 중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예외 없이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재식별금지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② 야당 소속 후보자 지지 혹은 정부 비판은 정치적 견해로서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정짓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것이 지지 선언 등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내에 속한다.
 -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 ④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사건에 대하여 이를 규정하지 않은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소년부송치 후 불처분결정을 받은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13. 다음 중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함께 보장되고, 재판청구권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 ②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격,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만, 외국에 나가 증거를 수집할 권리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에게 교정시설 내 규율위반에 대해 징벌을 부과한 뒤 그 규율위반 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 등을 관할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한 것은, 법관이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어 미결수용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 ④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청구권이 헌법규정으로부터 직접 발생하지 아니한다.

14. 다음 중 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35조 제1항은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 뿐만 아니라, 국민도 오염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개선에 관한 책임까지 부담함을 의미한다.
 - ② 층간소음은 바닥을 공유하는 위·아래층 등 인접한 세대 간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온한 환경이 요구되는 주거 공간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구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원 등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환경권을 침해한다.
 - ③ 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데, 입법자는 환경권의 구체적인 실현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 ④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에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이 되는 제반 환경이 훼손되고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국가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의무도 포함된다.

15. 다음 중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거주·이전의 자유는 구체적으로는 국내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국외에서 ‘해외여행 및 해외 이주의 자유’를 포함하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국적변경의 자유’ 등은 그 내용에 포섭되지 않는다.
 - ②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구「지방세법」조항은 법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거주·이전의 자유는 자연인인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제한 없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사법인은 성질상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④ 여행금지국가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여권법」규정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6. 다음 중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에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이른바 ‘청년할당제’는 35세 이상의 미취업자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소주판매업자에게 자도소주구입을 강제하는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는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 이므로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계속성과 생활수단성을 개념표지로 하는 직업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학업수행이 본업인 대학생의 경우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또는 휴학 중에 학비 등을 벌기 위해 학원강사로서 일하는 행위는 일시적인 소득활동으로서 직업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17.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장래에 건축이나 개발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나 신뢰 및 이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②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서 보수의 구체적 수준이 형성되면 직업공무원제도의 한 내용으로서 재산권적 성격이 인정되는 공법상 권리가 된다.
 - ③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각종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법률상·사실상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 ④ 광업권은 국가가 일정한 미채굴 광물의 채굴·취득을 위하여 부여하는 권리로서, 토지소유권과 분리된 독자적 권리는 아니다.

